

보도 일시	2022. 10. 19.(수) 14:00	배포 일시	2022. 10. 19.(목) 14:00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현 (044-203-2811)
		담당자	사무관 조상훈 (044-203-2812)

정부는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으며,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의 회복과 도약에 앞장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0월 19일(수)에 열린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 전국 관광인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외입국자 코로나 의무 진단검사가 폐지(10. 1.)되고, 11월 1일부터는 일본과 대만 등 8개국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는 등 외국인 국내 관광(인바운드) 회복을 위한 여건이 차차 갖춰지고 있지만,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업체들이 받은 타격이 워낙 커 회복을 실감하기 어려우며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관광업계의 입장과 요청 사항을 고려해, 비자 제도와 출입국 제도 개선,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 등 국내 관광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사 위기·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 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금융지원을 통한 뒷받침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여행수요를 높이기 위해 방한 시장별 유치전략에 기반한 한국문화(케이컬처) 연계 마케팅, 국내 여행수요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으로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정책 토론회(7회), 업종별 간담회(16회), 시도관광과장회의(9. 20.), 시도관광국장회의(10. 6.), 관광업계 정책 간담회(10. 13.) 등 관광업계와 학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권기대회에서 요구한 관광생태계 회복 방안도 충실히 검토, 반영해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으로서 제시할 계획이다.

